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석사학위논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연 정 은

국 문 초 록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 놓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였다. 고유업종제도란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제도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문화 · 분업화를 유도하여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약화,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 회피, 외국기업의 시장점유 확대 등의 폐해를 야기하였다는 비판 하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지수, 부가가치 생산성 등 여러 지표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업종 확장이 이슈화됨에 따라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었다. 적합업종제도는 고유업종제도와 도입 취지가 동일하나 민간 위원회가 제도 운영주체이며 사회적 압력을 통한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대기업의 진입 이외에도 확장 자제, 자발적 사업이양까지 유도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 중인 적합업종제도는 폐지된 규제의 부활이라는 비판과 장기적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이라는 지지 여론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 찬성 측에서는 기업 생태계적 측면, 유치산업보호 효과를 들 수 있고 반대 측 논거로는 인위적 진입장벽의 비효율성 문제, 차선의 이론, 정부실패를 들 수 있다.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업종 · 적합업종제도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부분이 시계열 분석 및 추세 예측에 그쳤고 유일하게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표본 수가 작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표

본을 확보하고 연도별 · 산업별 통제변수를 도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업종제도는 실시된 기간이 매우 짧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고유업종제도가 실시되었던 기간 중 1992년 ~ 2006년 동안 54개 업종, 645개 패널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독립변수는 고유업종 지정연차와 지정 해제 후, 지정해제 연차로 시간경과에 따라 제도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 생산규모를 설정하여 정책이 의도하였던 중소기업 보호 및 성장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시장금리를 연도별 경기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변수로 도입하고 10개의 산업 중분류 더미를 산업별 경제상황을 통제하는 변수로 도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 생산규모를 모두 감소시켰고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지정해제 연차의 증가 역시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 생산규모를 모두 감소시켰다. 이상에서 고유업종으로 주로 사양업종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추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4개 표본업종 중 사양업종 10개 업종을 더미변수($0 =$ 비사양업종, $1 =$ 사양업종)로 설정하여 연차변수($1 = 1992$ 년, $2 = 1994$ 년, ..., $13 = 2006$ 년)와 곱한 ‘사양업종더미 \times 연차’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사양업종의 영향을 통제하여도 고유업종 지정연차의 증가가 생산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소기업체 수와 평균 생산규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유업종제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생산규모를 감소시키며 중소기업체 수나 평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즉 기대하였던 중소기업 보호 및 성장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서는 고유업종제도가 경쟁제한적 규제로서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채, 기업 간 경쟁이 발생하여 가격경쟁에만 집중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중소기업이 지대추구행위를 하거나 X-비효율성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규모가 더욱 영세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고유업종 지정해제 이후에도 대기업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수가 더욱 빠르게 감소하였다. 사양업종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지정해제 이후, 생산규모 및 평균 생산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고유업종제도 졸업 이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지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지도 못하였다.

적합업종제도는 비록 규제주체가 민간 위원회이고 사회적 제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나 그 취지가 고유업종제도와 같고 대기업의 사업이양까지 권고할 수 있어 경쟁제한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현대경제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정의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을 적절히 선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합업종제도도 긍정적인 영향보다 그 폐해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업종 규제 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타파, 중소기업의 자금·인력난 해소,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정 경쟁시장 조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중소기업, 동반성장, 고유업종제도, 적합업종제도, 산업성장, 생산규모

학번: 2012-23769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방법	6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7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선행연구	7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선행연구	8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논문의 의의	8
제 2 장 제도 현황 및 관련 이론	10
제 1 절 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10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10
1) 개념 및 도입배경	10
2) 내용 및 운영절차	11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13
1) 개념 및 도입배경	13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가이드라인	14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준 및 절차	15
3.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 간 비교	18
제 2 절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1. 찬성 논거	21

1) 기업생태계적 측면	22
2) 유치산업보호론적 측면	24
2. 반대 논거	25
1) 인위적 진입장벽의 문제	25
2) 차선의 이론적 측면	27
3) 제도 운영과정상의 정부실패	29

제 3 장 연구의 설계 31

제 1 절 가설의 설정 31

제 2 절 표본 및 변수 선정 33

1. 분석의 틀	33
2. 표본 설정	35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9
1) 통제변인: 1인당 실질국민소득, 시장금리, 산업 구분 ...	39
2) 독립변인: 업종 지정연차, 업종 지정해제 연차	39
3) 종속변인: 사업체 수, 실질출하액, 평균 실질출하액	40

제 3 절 회귀분석 모형 설정 43

1. 가설 I-1, II-1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	43
2. 가설 I-2, II-2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	43
3. 가설 I-3, II-3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	44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45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45

1.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45
2. 독립변수 기술통계분석	46

3. 통제변수 기술통계분석	47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48
1.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 검증	48
1)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 진단	49
2)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	50
2.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51
1) 종속변수가 사업체 수인 모형: 가설 I -1, II -1	51
2) 종속변수가 실질출하액인 모형: 가설 I -2, II -2	53
3) 종속변수가 평균 실질출하액인 모형: 가설 I -3, II -3	55
3. 추가적 회귀분석: 사양산업 통제	58
1) 사양업종의 기준 및 추출	58
2) 추가 회귀분석모형	60
3) 추가 회귀분석 결과	61
(1) 다중공선성 및 자기공선성 진단	61
(2) 회귀분석 결과	62
4. 종합 해석	65
제 5 장 결 론	7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70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71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73
참고문헌	74
부록	78

표 목 차

<표 I-1>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 및 해제 추이	5
<표 I-2>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	6
<표 II-1>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기준	16
<표 II-2>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 비교	20
<표 III-1> 추출된 업종 표본	36
<표 III-2> 산업중분류 구분별 업종 표본	37
<표 III-3> 추출된 표본의 고유업종·적합업종 선정기간	38
<표 III-4> 주요 변수 요약	42
<표 IV-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46
<표 IV-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46
<표 IV-3> 고유업종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48
<표 IV-4> Durbin-Watson 통계량	50
<표 IV-5>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50
<표 IV-6> 가설 I-1, II-1모형 (종속변수: 사업체 수)	51
<표 IV-7> 가설 I-2, II-2모형 (종속변수: 실질출하액)	53
<표 IV-8> 가설 I-3, II-3모형 (종속변수: 평균 실질출하액)	55
<표 IV-9> 가설 검증 결과	57
<표 IV-10> 사양업종의 연도별 실질출하액	59
<표 IV-11> Durbin-Watson 통계량	61
<표 IV-12>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61
<표 IV-13> 추가 회귀분석모형 1 (종속변수: 사업체 수)	62
<표 IV-14> 추가 회귀분석모형 2 (종속변수: 실질출하액)	63
<표 IV-15> 추가 회귀분석모형 3 (종속변수: 평균 실질출하액)	64
<표 VI-1> Durbin-Watson 통계량	79
<표 VI-2>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79

<표 VI-3> 부록 회귀모형 1 (종속변수: 사업체 수).....	79
<표 VI-4> 부록 회귀모형 2 (종속변수: 실질출하액).....	80
<표 VI-5> 부록 회귀모형 3 (종속변수: 평균 실질출하액).....	81

그 립 목 차

<그림 II-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절차.....	12
<그림 II-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절차.....	17
<그림 III-1> 연구 모형.....	34
<그림 IV-1> 사양업종의 연도별 실질출하액 변화 추이.....	5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60~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다. 2009년 폐지되기까지 존속하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도급거래법」,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다양한 법제를 도입하여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기대하였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 지수 격차는 2007년 5.4에서 2012년 39.1로 벌어졌고 대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2007년 대비 2011년 1억 1,646만원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937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¹⁾. 복리후생 수준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 2011년 중소기업의 급여수준이 대기업의 64.9%, 법정복리비 수준이 66.4%에 머물렀다²⁾.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소위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이 일었다.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잠식하고 중소기업이 발굴한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한다는 것이다³⁾. 이에 이명박 정부는 상생전략으로서 ‘동반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동반성장위원회⁴⁾’를 설치하여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해결의 구심체로

1) 내일신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aid=0002165286>)

2) 데일리중앙(<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0>)

3)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10413/36396649/1>)

4) 2010년 12월 출범한 민간위원회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산출 등을 총괄하며 위원장, 대기업 측 위원 9인, 중소기업 측 위원 9인, 공익위원 6인,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았다. 그리고 2011년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목록을 선정·발표함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실시되었고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취지 하에 도입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취지로 추진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다(황인학, 2011). 1979년 중소기업 특화업종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선정된 고유업종에서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는 규제정책의 일환이었다. 최대 237개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였으나 2006년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비판으로 폐지되었다.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자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견(異見)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폐지하였던 고유업종제도를 사실상 재도입하는 것은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회피와 외국기업의 시장점유 확대 등의 폐해를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⁵⁾. 반면,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제도 도입이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기대하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⁶⁾’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세전순이익률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어 2010년 대-중소기업 간 세전순이익률 격차가 4.5%p로 독일($\Delta 2\%$ p), 미국(2%p) 등 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유광수, 2012). 일각에서는 적합업종제도는 고유업종제도와 비록 취지는 같으나 규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고유업

5) 이데일리뉴스(<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1728566603009656&DCD=A00306&OutLnkChk=Y>)

6) 대기업에 대한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그 효과가 넘쳐 중소기업으로 확산된다는 내용(김세중·노용환, 2011)

중제도가 야기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김세중·노용환, 2011) 다른 한편에서는 적합업종제도의 규제가 고유업종제도보다 약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⁷⁾.

이제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품목 선정이 있을 때마다 격렬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제도의 전신이자 비교대상인 고유업종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여 년간 축적된 자료를 통하여 고유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 적합업종제도가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예측 및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시행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연구는 고유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체수·출하액의 변화를 보고 상관관계를 유추하는 방식(이윤보·이동주, 2004)이나 몇 개의 업종에 대한 사례연구(황인학, 2011; 신기룡, 2012), 인터뷰 등을 통한 정성적 조사(김은자, 1997)에 그쳤다. 객관적 통계지표를 이용하더라도 통계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석하거나 통계분석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는(유진수, 1997)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아직까지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논하고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김세중·노용환, 2011; 이선휘, 2012).

따라서 본 논문은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연도별·업종별 경제상황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제도 도입이 시간에 따른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제도를 둘러싼 찬반

7)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35>)

의견의 경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실증 분석이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지 살펴본 후, 더 나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시 3년차를 맞아 앞으로의 제도 운영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체 수와 생산규모, 평균 생산규모 등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지닌 중소기업 보호 및 성장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찬반논의의 경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이론들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론적 ·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성장에 미칠 영향 및 제도운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모집단은 1979년~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정된 기간이 2년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짧아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1979년 최초로 고유업종을 지정한 이후, 1989년까지 신규지정이 이루어져 237개 업종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4년부터 지정해제가 확대되어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여업종을 모두 지정해제하기로 결정하고 고유업종제도를 규율하는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도를 폐지하였다(중소기업청, 2004; 신기룡, 2012). 이 중 최대한 과거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업종을 추출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초 자료까지 수집하여야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변경되거나 자료가 누락된 업종은 제외시키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는 업종을 위주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 I -1>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 및 해제 추이

(단위: 개)

구 분	'79	'83	'84	'89	'94	'95	'97	'01	'04	'05	'06
신규지정	23	80	104	49	-	-	-	-	-	-	-
지정해제	-	-	2	17	58	45	47	43	8	19	18
업종총계	23	103	205	237	179	134	88	45	37	18	0

(자료: 중소기업청)

한편, 최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2011년 5월 129개 업종, 234개 품목 신청을 접수하여 2011년 9월 27일(16개 품목), 11월 4일(25개 품목), 12월 13일(38개 품목), 12월 30일(3개 품목) 등 네 차례에 걸쳐 총 82개 품목이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되었다(박충렬, 2012).

<표 I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

(단위: 개)

구 분	1차선정	2차선정	3차선정	4차선정	합계
사업이양	1	-	-	-	1
일부 사업철수	-	16	-	1	17
사업축소	-	1	5	2	8
진입자제	4	1	3	-	8
확장자제	11	1	30	-	42
진입 및 확장자제	-	6	-	-	6
총계	16	25	38	3	82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2. 연구방법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 분석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통계분석모형을 설계한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 상황에 적합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찬성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 개념과 유치산업보호론을,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있는 진입장벽 설치문제, 차선의 이론, 정부실패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현상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관련 국내외 학위·학술논문, 학술저널 등을 수집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통계모형에 기반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업종별 각종 통계지표를 수집하였다. 분석모형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신뢰도가 부족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본 논문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 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선행연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현재 적합업종제도와 비교연구까지 20여년간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계분석 도구를 사용한 실증 분석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연도별 수치변화나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영향을 추정하는 것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고유업종 지정기간 내 연구로 유진수(1997)는 30개 품목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 고유업종 지정이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반면에 이윤보·이동주(2004)는 고유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수출·수입액 등의 변화를 보고 고유업종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는 기여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약화시켰다고 추정하며 단계적 축소를 주장하였다. 산업연구원(1992)도 연도별 수치변화를 토대로 고유업종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기존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저하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업종지정의 단계적 축소를 제안하였다. 임해진(2004)은 고유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유업종제도가 과당경쟁, 기술개발투자 부진으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지연시켰다고 분석하였다.

고유업종 폐지 이후에 대하여 황인학(2011)은 두부제조업 분야의 연도별 사업체수, 출하액, HHI지수 등의 변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한 반면, 신기룡(2012)은 14개 업종에서 사업체수, 고용, 출하액이 모두 감소하였다고 보았다.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선행연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실시된 기간이 짧아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논하고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나타난다.

찬성 의견을 밝힌 연구로 김세종·노용환(2011)은 적합업종 선정기준과 쟁점사항을 논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신기룡(2012)은 전신인 고유업종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합업종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논하였다. 김경무(2012)는 적합업종제도가 상생협력 및 국가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고 유광수(2012)는 적합업종의 실효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반대 의견을 밝힌 연구로 이선화(2012)는 고유업종 해제 이후, 경영실적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고 급변하는 현 경제상황에서 적합업종 지정은 부작용이 크다고 보았고 황인학(2011)은 고유업종 폐지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업종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강창동 외(2012)는 적합업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논의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방지 외의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논문의 의의

지금까지 고유업종·적합업종에 대한 선행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 중 유일하게 회귀분석을 실시한 유진수(1997)의 연구도 통계적 유의성

이 낮게 나타나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는 설문조사와 같은 정성적 연구나 연도별 수치변화를 토대로 고유업종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그쳤다. 황인학(2011)은 HHI지수를 도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두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여개에 이르는 고유업종과 80여개에 이르는 적합업종의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이 있다. 적합업종은 실시된 기간이 짧아 아직 자료나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고유업종 폐지 이후의 수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적합업종의 효과를 예측하고 찬반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표본과 자료를 바탕으로 찬반 대립이 있어 제도에 대한 판단이 귀일되지 않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갖고 있던 표본 부족, 실증분석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 중 되도록 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고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시계열에 따른 수치 변화 추이 분석은 연도별 경제상황이나 업종별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아 제도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축소 해석할 위험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통계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연도별, 업종별 변화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업종 지정 · 해제 연차 변화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출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단순한 업종 지정여부가 아닌 지정연차 및 해제연차 경과에 따른 산업성장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업종 보호를 졸업한 이후에 나타나는 제도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유업종제도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 장기적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2 장 제도 현황 및 관련 이론

제 1 절 고유업종·적합업종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1) 개념 및 도입배경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중소기업청, 2010). 이 제도는 과거 정부의 대기업 중심적 경제 성장정책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간 사업의 분업화·전문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업종을 중소기업형, 전문계열화형, 대기업화형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는 고유업종제도 이외에도 사업조정제도가 존재한다. 사업조정제도는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서 시작되어⁸⁾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

8) 현재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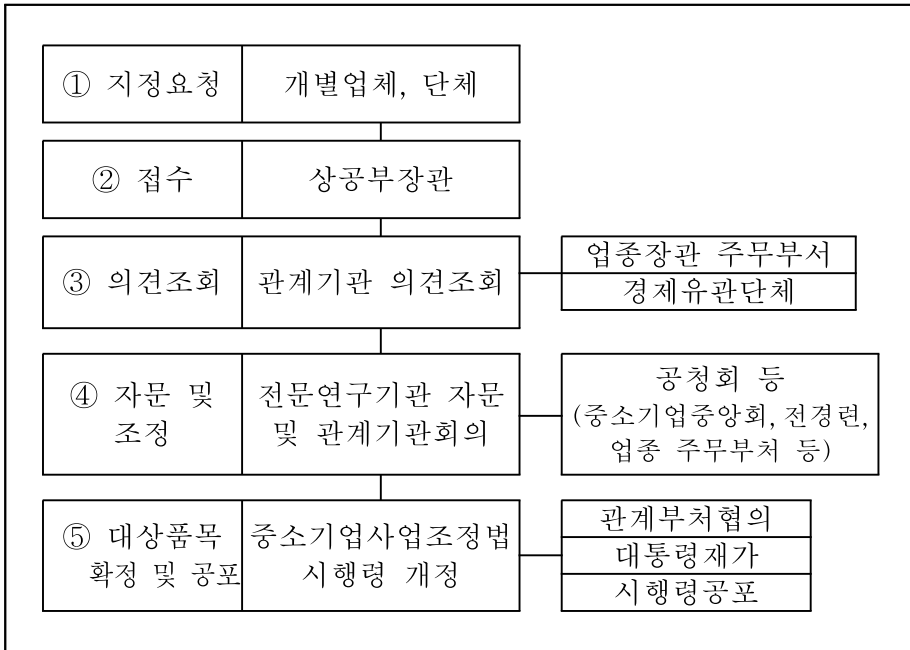
역 침식에 대하여 대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조정제도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불문하고 사업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서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야기되는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사후적 보호장치인데 비하여 고유업종제도는 사전적 보호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윤보·이동주, 2004).”

2) 내용 및 운영절차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 및 해제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업종 지정기준은 ① 중소기업형 업종이고 ②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며 ③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비교적 큰 품목이고 ④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품질향상이나 수급에 문제가 없고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기존 중소기업자의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현저히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유진수, 1997). 대기업의 고유업종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반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및 사후조정을 통하여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고유업종 지정절차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공부 내부규정에 따랐다. 상공부에서 개별업체 또는 단체로부터 고유업종 지정 신청을 받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주무부서 간 조희와 전문연구기관 자문 및 관계기관 회의를 거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령을 개정 · 공포하였다.

<그림 Ⅱ-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절차



(자료: 산업연구원, 1992)

지정절차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업종을 지정할 때, 이익집단과 정부 간 형식적 합의 절차만을 거치고 객관적·경제적 분석은 배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유업종 선정이 주로 기업 간 이해관계나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컸다.

고유업종제도가 기한없이 중소기업의 배타적인 사업영역을 보호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추구할 유인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989년 고유업종 지정기간에 제한을 두는 해제예시제를 도입하였다. 그 기준은 “① 고유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동안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품목, ② 고유업종지정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상호간에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품질수준의 저하, 소비

자 불이익의 초래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 ③ 대량 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거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품목 등이었다(김갑곤, 1994).” 이후, 2006년 모든 고유업종이 지정해제되면서 제도가 폐지되었다.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1) 개념 및 도입배경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서 대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이양 및 진입·확장 자체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세중·노용환(2011)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첫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나타난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확장, 둘째, 고유업종제도와 같은 보호조치의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 셋째,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부족 때문이다.” 즉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적절한 장치가 없으며 사업조정제도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010년 정부가 발표한 제도 추진배경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해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⁹⁾. 여기서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이란 최소효율규모(minimum

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관계부처 합동(2010.9.29.), p.13 참조

efficient scale)¹⁰⁾가 작거나 대기업의 참여가 독과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가 큰 업종은 중소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앞에서 언급한 고유업종제도에서의 업종 구분 중 중소기업형 업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합업종제도가 고유업종제도와 그 취지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두 제도가 취지는 동일하나 업종지정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고유업종제도의 강제적 규제가 유발하는 반발과 장기간의 보호기간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적합업종제도는 민간의 합의를 통한 권고 및 공표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 규제 제도이기 때문에 고유업종제도와 궤를 같이한다. 김세종·노용환(2011)은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사전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던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적합업종제도 도입의 의의를 찾고 있다.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가이드라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운영 가이드라인(김세종·노용환, 2011, 재인용)에 따르면 첫째, 대기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지만 업종, 산업구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¹¹⁾생산은 원칙적으

10) 최소효율규모란 평균비용곡선 상에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생산수준을 나타내는 점을 의미한다. 생산을 시작하는 데 큰 비용을 소요하는 고정설비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설비용량에 걸맞은 수준까지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단가의 하락현상은 멈추게 된다. 이러한 수준의 생산규모를 최소효율규모라 한다. 따라서 최소효율규모가 작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적게 나타나며 중소기업 간 경쟁체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은태 편, 2011).

11) OEM이란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

로 금지하되 중소기업의 유통망 구축여부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수출용 생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판매가 아닌 자가 소비형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한다. 다섯째, 일몰제를 도입한다. 최초 적합업종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3년의 재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즉 총 지정기간을 6년으로 한정하였으며 1년 단위로 업종의 성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업종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3단계로 권고수준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단계는 진입자제로 대기업에 신규진입 자제를 권고하는 단계로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시도한다면 추후 사업조정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한 단계이다. 2단계는 확장자제로 이미 대기업이 진입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사업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사업이양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의 사업철수를 권고하는 단계이다.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준 및 절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기준은 다음의 <표 II-1>과 같다.

의 주문자위탁생산을 말한다(시사상식사전, 2008). 본 논문에서는 유통망을 구축한 대기업이 중소 제조업체에 상품 제조를 위탁하여 대기업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표 II-1>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기준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제도운영의 효율성	· 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 시장규모(출하량)
중소기업 적합성	· 최소효율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
	·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1인당 생산량÷대기업 1인당 생산량)
	·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부정적 효과 방지	· 소비자 만족도
	· 협력사 피해
	· 수입 비중
	· 대기업 수출 비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 매출액 대비 R&D 투입비중
	· 경쟁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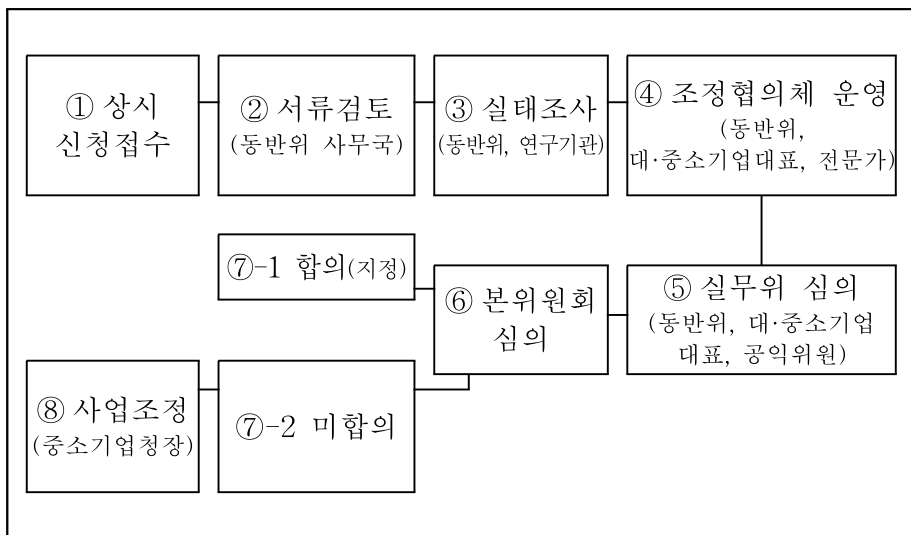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참여 중소기업 수와 시장규모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업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 수가 너무 적으면 적합업종을 지정할 실익이 작고 너무 많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적합성 측면에서는 최소효율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의 신규진입과 경쟁시장 형성이 용이한 업종이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의 생산성보다 높고 해당 업종에서 중소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적합업종 지정 시, 고용이 크게 증가할 업종을 지정한다. 부정적 효과 방지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할 우려가 적고 대기업 협력사의 피해가 되도록 작아야 한다. 또한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수입 비중이 증가하거나 외국 기업의 국내진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야 하며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이어야 한다.

적합업종 지정절차는 총 8단계를 거친다.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로부터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연구기관과 함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한 후, 실무위원회에 회부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최종협의를 거쳐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하고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만약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그림 II-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절차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3.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 간 비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는 그 취지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영역의 사전적 보호와 이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으로 같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는 산업정책 보다는 중소기업 복지정책에 가깝다(황인학, 2011)는 견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론과 잠정적인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김세중, 2012)이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배경, 정책목표, 업종선정주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즉 단순히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업·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양 제도는 기업간 양극화 문제에 대한 동일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이 시장실패에 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고유한 업종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종을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실제로는 대기업이 침범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시장을 차지하고 비효율적인 대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그러나 두 제도는 대기업이 우월한 자본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잠식하고 중소기업을 퇴출시킨다고 전제한다.

둘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직접적·사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에서 한 전제처럼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금지시켰고 적합업종제도는 신규진입 자제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확장을 자제하거나 사업을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 인력 등 간접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업종 자체를 규제하는 직접적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조정제도가 대기업의 사업 진입 이후,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고유업종 ·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행위 등 분쟁발생 이전에 업종에 대한 포괄적 · 사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는 이처럼 동일한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나 규제범위, 선정주체 등 제도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표 II-2>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 비교

구분	고유업종제도	적합업종제도
목적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규제 범위	대기업의 신규진입 금지	대기업의 진입·확장 자제 및 자발적 사업이양 유도
선정 주체	정부(舊 상공부)	민간(동반성장위원회)
지정 분야	전통제조업 위주	전통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범위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중견기업 포함)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보호 방식	법률상 강제	사회적·정치적 압력에 의한 자율규제
보호 기간	사전 제한 없음 (‘89년 졸업예시제 운용)	제한 있음 (초기 3년 + 추가 3년)
벌칙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신고위반 등)	동반성장지수 가점 및 감점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참고 재구성)

<표 II-2>를 살펴보면 양 제도 간 차이점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 · 경직성의 정도이다. 고유업종제도는 정부에서 업종을 선정하고 벌칙이 존재하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등 강제적·경직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에 비하여 적합업종제도는 비록 정부가 설치하였으나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업종을 선정하고 제한된 보호기간 하에서 사회적 압력을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적합업종은 강제적 적발·벌칙을 통한 규제가 아닌 동반성장 기여도에 따른 평판(reputation)효과를 이용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대상 대기업의 범위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좁아졌다. 적합업종 도입 당시 고유업종이 야기하였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의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여 고유업종처럼 법제화 및 실질적 벌칙규정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¹²⁾.

본 논문에서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 보호와 중소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적합업종의 고유업종 화(化)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찬성 논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는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 복지정책에 가깝다”는 의견(황인학, 2011),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시장확대를 제한해야한다는 생존권 보호론과 사회적 마찰 최소화를 위한 잠정적 방안이라는 논리”(김세중, 2012)등이 제기되고 있어 찬성논거로써 경제이론 외에도 사회정책 관련 이론이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경제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2)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0401070523318002>),
매경이코노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45489>)

1) 기업생태계적 측면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정도로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논하는 논문에서 기업생태계 개념을 이론적 근거로써 제시하고 있다(김민재, 2013; 김진영, 2008; 오정근, 2012; 조기수, 2013). James F. Moore(1993)에 따르면 기업생태계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자, 유통업자, 기술제조업자 등 여러 주체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가리킨다. M. Iansiti & R. Levien(2004)은 “기업의 가치창출에 영향을 주고받는 기업들 간 느슨하게 결합된 연결망”이라고 정의한다. 이상의 개념을 종합하면 기업생태계란 핵심사업과 직접 관련된 핵심기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협력기업 간의 공생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생태계 개념을 처음 제시한 Moore(1993)는 기업의 외부환경이 생물학적 생태계와 같은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았다. 생태계에 기후변화·자연재해 등의 변화가 생기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기업도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진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업생태계 내부의 변화를 위해서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한 경험의 확대·재생산 및 상호신뢰 형성이 중요하고 미래 경제는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 생태계 간 경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김진영, 2008). 즉 기업생태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생태계 내부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던

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Iansiti & R. Levien(2004)은 기업생태계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생산성(Productivity), 강건성(Robustness), 창조성(Niche Creation)”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¹³⁾. 생산성은 생태계 개별 주체들의 부가가치로서 기술·인력·자본 등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 강건성은 생태계 내 기업들의 원활한 유입과 퇴출을 통한 다양성 및 개체의 대체가능성으로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특성을 말한다. 창조성은 생태계가 틈새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포착하여 혁신을 이루고 생태계의 사업범위를 확장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우수인력·안정적 자본공급이 부족하여 생태계 생산성·창조성이 낮다. 강건성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미흡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어 전근대적 거래관행 및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계속됨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기업생태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조기수, 2013).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불공정 경쟁구도에 놓인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생태계 경쟁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조치로서 중소기업 복지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김세중, 2011; 김경무, 2012; 유광수, 2012).

13) 기획재정부(2012)는 각각의 평가요소를 공급업체 경쟁력, 연결 경쟁력, 혁신체제 경쟁력으로 해석한 바 있다.

2) 유치산업보호론적 측면

유치산업보호론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취하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한 국가 내 기업집단 간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자유무역협정과 충돌 등 국제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신기룡, 2012; 이선화, 2012; 임상혁, 2012)과 국가 간 무역과 국내 기업 간 거래라는 차이가 있다 하여도 주장이 시사하는 바가 유사하다는 점¹⁴⁾에서 살펴볼 의미가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이란 산업화가 뒤떨어지는 후진국에서 먼저 유치산업(infant industry)¹⁵⁾을 보호하여 공업부문이 성숙한 후에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후진국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보호무역주의이론이다¹⁶⁾. 이론을 체계화한 독일의 Friedrich List는 유치산업을 성장시켜 국가의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한 국가발전단계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을 취해 비교우위산업 육성 보다는 수입대체산업을 보호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치산업 선정기준에 J. S. Mill은 일정기간 보호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비교우위가 되어야 함을, C. F. Bastable은 여기에 추가로 유치산업 성장으로 발생할 미래이익의 현재가치가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투하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아야 함을 꼽았다¹⁷⁾.

14) 산업연구원(1992)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의 긍정적 측면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국산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한 경우 이를 일정기간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유치산업 보호의 기능을 꼽았다.

15) 유치산업이란 한 나라의 산업 중 장차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최초의 실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금융적인 곤란을 받고 있는 미발달의 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정책으로 그 산업에 대한 보호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그 산업은 기술적 효율을 이룩할 수 있어 생산비용이 저하되고 그 결과 외국의 산업 및 상품과의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다(박은태, 2011).

16)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837&cid=40942&categoryId=31864>)

17)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837&cid=40942&category>

이상의 유치산업보호론의 논지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의견의 논지와 유사하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향후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산업이 존재한다는 전제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우위를 갖는 업종이 있으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호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이득이 충분하다면 일정기간 동안 적합업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우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김세종·노용환, 2011; 유광수 2012). 유의해야 할 점은 유치산업보호론에서는 유치산업을 보호하여 외국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하였다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적합업종제도에서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치산업보호론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

2. 반대 논거

1) 인위적 진입장벽의 문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신규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규제이다. 이 제도의 전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과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대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인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표 II-1 >의 적합업종 선정기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대기를 규제하고 중소기업이 주류가 되어야 하는 업종인지는 불확실하다.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경영방식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 생산하여야 적합한 업종이라고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규제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중소기업체가 주로 생산을 담당하였고 고유업종·적합업종에 지정된 재생타이어는 최근 저탄소·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글로벌 업체¹⁸⁾들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선화, 2012).

또한 경쟁시장에 임의적으로 진입장벽을 설치하면 기업 간 경쟁이 저해되고 이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한다. 적합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면 중소기업은 스스로 기술력을 향상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Gordon Tullock이 지적한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의 유인이 커진다. 즉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를 하는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적합업종 내에서 자신의 기업을 대체할 기업이 진입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업의 경영진과 노동자들은 비용극소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생겨 X-비효율성(X-inefficiency)을 유발한다. 게다가 대기업 제품의 퇴출로 제품다양성이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합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에

18) 미국은 타이어 시장의 50% 이상을 재생타이어가 차지하며 브리지스톤-팬택, 굿이어, 미쉐린의 3대업체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56537&Branch_ID=kr&rssid=naver)

신규 진입할 유인이 생긴다. 대기업을 배제한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기술·비용경쟁력이 다른 중소기업 수준만 된다면 진입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기업의 활발한 신규참여를 유발하여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김세종·노용환, 2011). 게다가 영세소기업은 기술개발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품질경쟁 보다는 가격경쟁에 주력하여 산업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적합업종 내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기업이 오히려 자신의 기업을 쪼개어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사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다수의 중소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우려가 있다(신기룡, 2012).”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적합업종제도가 고유업종제도와 달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유인체계를 마련해놓았다는 주장(김세종·노용환, 2011; 유광수, 2012)이 있어 추후 본 논문 연구를 통해 그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차선의 이론적 측면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 적합업종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반드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리라고 볼 수 없다. 차선의 이론이란 R. Lipsey & K. Lancaster가 증명한 이론으로 k 개의 효율성 조건 중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 비해 한 개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반드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¹⁹⁾. 즉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k 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k-1)$ 개의 조건

19) 경제학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648&cid=520&categoryId=520>)

이 충족된 상황이 반드시 차선책은 아니라는 이론이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목표는 네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독자적 사업영역 보호, 둘째,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셋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타파, 넷째, 중소기업에 불리한 인력·금융환경 개선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첫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둘째 목표까지 달성되기를 기대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네 개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한 채, 한두 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인력 및 금융 지원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할 실질적 방안이 없으며 2013년 하도급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와 하도급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 없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클 우려가 있다. 또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수가 같아야 하며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여러 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틴버젠 법칙(Tinbergen's theorem)에도 어긋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통하여 양극화 해소의 여러 정책목표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제도 운영과정상의 정부실패

고유·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최적의 자원 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²⁰⁾.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고유업종 지정절차에서 이해관계자와 정부 간 합의 절차만을 거치고 객관적·경제적 분석이나 체계화된 지정기준 없이 업종 지정이 이루어지며 지정 이후,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과정도 없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되고 당사자 간 정치적 논의나 여론에 따라 고유업종이 결정될 여지가 매우 크다. 실제로 이운보·이동주(2004)는 45개 고유업종의 출하액 성장률을 바탕으로 다수의 업종이 태동기나 성장기가 아닌 성숙기 및 쇠퇴기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낮은 사양업종을 보호하여 정책 효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업종전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적합업종은 고유업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체계화하고 협의 단계를 세분화하였으며 정부가 아닌 민간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정보 부족, 근시안적 시야 및 제도 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업종 선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여전하며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등 정치적 여론의 영향에 휘둘려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적합업종 선정기준 중 중소기업

20)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76296&cid=40942&categoryId=31819>)

업 적합성 항목의 최소효율규모 항목은 정확한 도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조건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이선화, 2012).” 게다가 적합업종 지정 3년 후, 성과평가에 따라 적합업종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들은 추가로 경제적·행정적 순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김필현, 2011).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찬반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찬성 측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한다고 본다. 대기업 횡포로 퇴출되는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중소기업체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비효율적 진입을 차단시켜준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더욱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유치산업보호론 입장에서는 고유업종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유치산업이기 때문에 고유업종 지정기간 동안에 점차 성장하다가 보호기간을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부실패를 들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바람직하다 해도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실패의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 수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생산규모는 감소하리라고 본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의 존재 여부도 의문이며 적합업종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대-중소기업 간 제도적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은 채, 업종 진입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쟁제한으로 인한 비효율성만을 낳을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업체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 간의 과당경쟁도 예상되므로 대기업이 퇴출된 고유업종 · 적합업종 시장에서 양적 · 질적 성장이 지연되리라고 본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들처럼 업종 지정 여부만을 독립변수로 두

고 분석한다면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유치산업보호의 논지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다. 업종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유치산업보호의 효과를 갖는다면 업종 지정연차가 증가할수록 중소기업체 수와 생산규모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對 대기업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호기간을 졸업한 이후, 즉 지정해제 이후에는 제도적 보호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의 이탈로 사업체 수가 감소할 수 있겠으나 생존한 양질의 중소기업들의 성장으로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업종 지정기간, 지정 해제 이후 기간에 걸쳐서 산업성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반대측의 논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치산업보호론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업 간, 기술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급속한 기술혁신이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유치산업을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설령 유치산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업종보호제도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유치산업보호론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고유업종제도로써 중소기업 보호를 통한 성장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위적 진입장벽의 폐해가 안정적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이점보다 더 크거나 Mill & Bastable 기준에 부합하는 고유업종을 선정할 역량이 정부에 없기 때문에 정치논쟁에 따라 업종이 선정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정책이 의도하였던 산업성장의 변화를 유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연구가설 I】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증가시키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며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가설 I-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체 수를 증가시킨다.

가설 I-2: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가설 I-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평균 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연구가설 II】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며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가설 II-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감소시킨다.

가설 II-2: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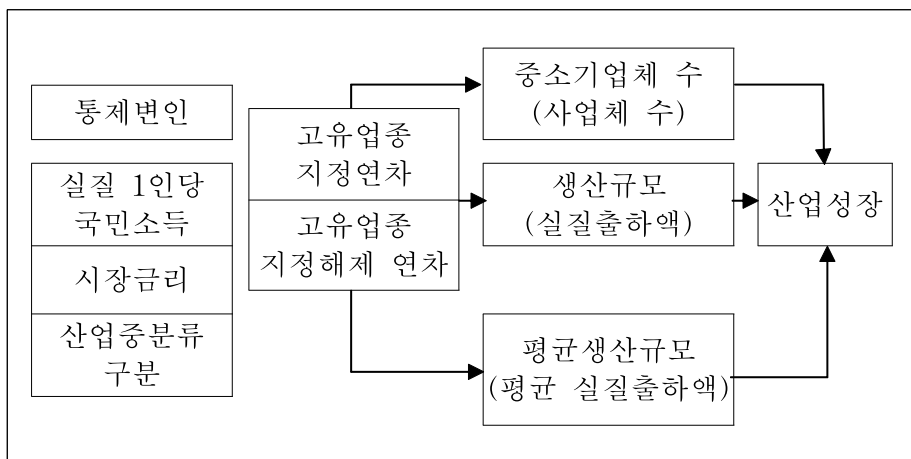
가설 II-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제 2 절 표본 및 변수 선정

1. 분석의 틀

시계열(time series)과 횡단면(cross section)자료를 복합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며 산업성장 분석을 위한 요인으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업종별 사업체수와 실질출하액 규모 및 평균 실질출하액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년간의 자료를 종합한 분석이므로 연도별 경제상황이 산업성장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장금리와 1인당 실질국민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업종이 속한 산업별 경기가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중분류 단위의 산업구분을 통제변인으로 한다. 독립변인은 각 연구가설에 따라 가설Ⅰ: 고유업종 지정연차, 가설Ⅱ: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로 두 개다. 또한 모든 연도별 변수는 물가상승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물가지수로 나눈 실질변수만을 사용한다. 이상을 연구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수집한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선형회귀방정식을 설정하여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으며 통제한다 하더라도 좋은 모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도별, 업종별 통제변수를 도입하기로 한다.

패널자료의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 유무는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하여 검증하고 공선성 진단을 통하여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유의확률(p-value)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표본 설정

본 연구는 고유업종에 지정된 적이 있는 총 237개 업종, 적합업종에 지정된 적이 있는 총 82개 업종을 모집단으로 하여 시장금리 집계가 시작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분류되어 자료 수집이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최대한 많은 표본을 추출하였다. 1993년, 1998년, 2011년에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은 총 54개 업종이다.

고유업종 또는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모든 업종 중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되어 정확한 사업체 수와 실질출하액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대한 과거의 자료까지 추출하였다. 편조장갑, 가죽장갑이 혼재되어 기록된 ‘장갑’과 아연분, 아연말, 아연분말 등 품목명이 일정하지 않은 ‘아연말’, 지속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물감’, ‘연마지석’, ‘타월’ 등의 업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불 및 요’, ‘벽시계 및 탁상시계’, ‘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가정 및 상업용 저울’ 등은 각 업종이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집계

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54개 업종의 1992년~2012년(1993년, 1998년, 2011년 제외) 동안 통계 기록에서 누락된 27개 자료를 제외하고 총 945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고유업종이 폐지된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54개 표본업종의 645개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 III-1> 추출된 업종 표본

구분	고유업종	적합업종	합계
단독 선정	이불 및 요, 골판지, 노트류, 앨범, 고무장갑, 연마지 및 포, 쇠뿔, 철망, 가정 및 상업용 저울, 밀링기, 안테나, 안경테, 안경렌즈, 헤드폰 및 이어폰, 보청기, 벽시계 및 탁상시계, 우산 및 양산, 기타 낚시장비, 핸드백, 바인더, 마네킹 (총 21개)	김치, 단무지, 녹차, 냉면, 간장, 고추장, 된장, 플라스틱용 금형, 프레스용 금형, 냉각탑, 배전반, 송배전 변압기, 아크용접기, 보통강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기타비철금속단조물, 보통강주물,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알루미늄주물, 레미콘(총 21개)	42 개
공통 선정	두부, 국수, 당면,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재생타이어, 아스콘, 생석회		9개

<표 III-2> 산업중분류 구분별 업종 표본

산업 중분류	고유업종	적합업종
식료품	두부*, 국수*, 당면*	두부*, 국수*, 당면*, 김치, 단무지, 녹차, 냉면, 간장, 고추장, 된장
섬유제품	이불 및 요	-
잡화제품	기타 낚시장비, 마네킹, 핸드백, 우산 및 양산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골판지, 노트, 앨범, 바인더,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비금속 광물제품	생석회*, 아스콘*, 연마지 및 포	생석회*, 아스콘*, 레미콘
1차금속·금속가공제품	쇠못, 철망	보통강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기타비철금속단조물, 보통강주물,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알루미늄주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세탁비누*	세탁비누*
고무제품	고무장갑, 재생타이어*	재생타이어*
전기장비	헤드폰 및 이어폰, 안테나	배전반, 송배전변압기, 아크용접기
기계장비	밀링기, 가정 및 상업용저울	플라스틱용 금형, 프레스용 금형, 냉각탑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품	보청기, 벽시계 및 탁상시계, 안경렌즈, 안경테	-

*는 고유업종과 적합업종에 공통으로 선정된 업종

<표 Ⅲ-3> 추출된 표본의 고유업종·적합업종 선정기간²¹⁾

선정기간	고유업종	적합업종
1992년~1996년 (1997.1.1.해제)	이불 및 요, 판지상자*, 세탁비누*, 헤드폰 및 이어폰, 밀링기, 철망, 기타 낚시장비, 핸드백, 바인더, 마네킹	-
1992년~2001년 (2001.9.1.해제)	벽시계 및 탁상시계, 골판지, 당면*, 앨범, 가정 및 상업용 저울, 보청기	
1992년~2004년 (2004.12.31.해제)	연마지 및 포, 고무장갑	
1992년~2005년 (2005.12.31.해제)	쇠뿔, 안경렌즈, 노트, 국수*, 두부*, 재생타이어*, 안테나	
1992년~2006년 (2006.12.31.해제)	안경테, 생석회*, 아스콘*, 골판지 상자*, 우산 및 양산	
2007년 ~ 2010년 공백기		
2011년~2014년 (2011.10.1. 또는 2011.12.1.선정)	-	김치,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세탁비누*, 플라스틱용 금형, 프레스용 금형, 보통강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기타비철 금속단조물, 보통강주물,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알루미늄주물, 골판지상자*, 아스콘*
2012년~2014년 (2012.1.1.선정)		단무지, 녹차, 국수*, 냉면, 당면*, 생석회*, 재생타이어*, 냉각탑, 배전반, 송배전변압기, 아크용접기, 레미콘, 판지상자*

*는 고유업종과 적합업종에 공통으로 선정된 업종

21) 헤드폰, 이어폰, 벽시계, 탁상시계, 우산, 양산은 고유업종 선정 당시에 분리된 업종으로 선정되었으나 통계조사 상에서는 합산하여 집계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통계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합산하여 논의하겠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통제변인: 1인당 실질국민소득, 시장금리, 산업 구분

연도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고유업종·적합업종제도와 무관하게 산업성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도별 경기변화를 통제하여야 한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호경기, 반대의 경우, 불경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경기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 경기전망, 통화량 등은 1인당 실질국민소득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²²⁾.

업종이 속한 산업별 경기변화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고유업종·적합업종이 속한 산업이 수요 증가, 자연재해, 기술 혁신, 산업 호황 등으로 제도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성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 중분류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추출된 표본 수를 고려하여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잡화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품 제조업의 11개로 구분하여 10개의 더미(dummy)변수를 사용한다.

2) 독립변인: 업종 지정연차, 업종 지정해제 연차

연구가설 I의 독립변인은 고유업종 지정연차로 업종 지정 전이나 후,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경우에 0의 값을 갖고 고유업종

22)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 긍정적 경기전망, 통화량 증가 등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므로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으로 지정된 지 1년차인 경우에는 1, 2년차인 경우에는 2, 3년차인 경우에는 3, ... 등으로 순차적인 등간척도 값을 갖는다. 가설Ⅱ의 독립변인은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로 업종 지정 전이나 지정 중,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경우에 0의 값을 갖고 고유업종으로 지정해제된 지 1년차인 경우에는 1, 2년차인 경우에는 2, 3년차인 경우에는 3, ... 등으로 순차적인 등간척도 값을 갖는다.

따라서 표본들 중 한번이라도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업종은 업종 지정연차 및 업종 지정해제 연차에서 1이상의 값이 한번 이상 나타나며 한번도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통제집단 업종의 경우, 두 독립변수가 모두 0의 값을 갖는다.

3) 종속변인: 사업체 수, 실질출하액, 평균 실질출하액

선행연구와 같이 중소기업 수의 변화는 사업체 수 변화로 파악한다²³⁾. 제조업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신규진입하거나 퇴출되는 업체들이 존재할 때,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진입과 퇴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생산규모의 변화는 실질출하액의 변화로 파악한다²⁴⁾. 업종의 생산규모는 생산량 및 출하량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실질출하액 변화는 제품가격 변화의 영향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출하량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각 업종의 출하액을 해당 업종 제품의 가격으로 나눠야만 실제 실질출하액 및 출하량 도출이 가능하나 연도별 제품가격 자료는

23) 황인학(2011)은 고유업종 해제 이후, 두부류 산업의 사업체수 증가를 바탕으로 대기업 참여로 많은 중소기업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업종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변화 통계가 더욱 정확하겠으나 업종 단위의 지속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업종 내 사업체 수 변화로 중소기업 수 변화를 파악하겠다.

24) 산업연구원(1992), 김갑곤(1994), 이윤보·이동주(2004), 임해진(2004)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제조업 평균에 비하여 출하액 비중 대비 사업체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고유업종 내에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밀집하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집계되지 않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한계점이 존재하나 연도별 물가지수로 나눈 출하액을 실질출하액으로 분석하겠다.

이와 더불어 평균 생산규모의 변화는 평균 실질출하액의 변화로 파악하겠다. 업종의 실질출하액으로 파악한 생산규모를 업종의 사업체 수로 나눈 값을 평균 생산규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균 생산규모는 평균 실질출하액이라고 보고 분석하겠다.

<표 Ⅲ-4> 주요 변수 요약

구분	변수 명	변수 산식	
독립 변수	고유업종 지정연차(BID)	0 = 미지정 or 지정 전 or 지정 후 n = 지정 n년차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BIU)	0 = 미지정 or 지정 전 or 지정 중 n = 지정해제 n년차	
통제 변수	실질 1인당 국민소득(INC)	실질국민소득 ÷ 총인구	
	시장금리 (RATE)	무담보콜금리 전체	
	산업구분 더미변수 10개 (0 = 해당없음) (모든 더미변수 0 = 식료품 제조업)	DUM1	1 = 섬유제품제조업
		DUM2	1 = 잡화제품제조업
		DUM3	1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DUM4	1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UM5	1 = 1차금속·금속가공제품제조업
		DUM6	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DUM7	1 = 고무제품제조업
		DUM8	1 = 전기장비제조업
		DUM9	1 = 기계장비제조업
		DUM10	1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품 제조업
종속 변수	사업체 수 (NUM)		
	업종별 실질출하액 (VOL)	해당 업종 출하액 ÷ 당해년도 물가지수	
	업종별 평균 실질출하액 (AVE)	$\frac{(\text{해당 업종 출하액} \div \text{당해년도 물가지수})}{\text{사업체 수}}$	

제 3 절 회귀분석 모형 설정

1. 가설 I-1, II-1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

고유업종 지정연차,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시장금리, 산업구분 더미변수가 ‘업종별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sum_{i=1}^{10} \delta_i D_i + \varepsilon$$

Y (NUM): 업종별 사업체 수

X_1 (BID): 고유업종 지정연차

X_2 (BIU):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

X_3 (INC): 실질 1인당 국민소득

X_4 (RATE): 시장금리

$D_1 \sim D_{10}$ (DUM1~DUM10): 산업구분 더미변수

ε : 오차항

2. 가설 I-2, II-2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

고유업종 지정연차,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시장금리, 산업구분 더미변수가 ‘업종별 실질출하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sum_{i=1}^{10} \delta_i D_i + \varepsilon$$

Y (VOL): 업종별 실질출하액

X_1 (BID): 고유업종 지정연차

X_2 (BIU):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

X_3 (INC): 실질 1인당 국민소득

X_4 (RATE): 시장금리

$D_1 \sim D_{10}$ (DUM1~DUM10): 산업구분 더미변수

ε : 오차항

3. 가설 I-3, II-3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

고유업종 지정연차,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시장금리, 산업구분 더미변수가 ‘업종별 평균 실질출하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sum_{i=1}^{10} \delta_i D_i + \varepsilon$$

Y (AVE): 업종별 평균 실질출하액

X_1 (BID): 고유업종 지정연차

X_2 (BIU): 고유업종 지정해제 연차

X_3 (INC): 실질 1인당 국민소득

X_4 (RATE): 시장금리

$D_1 \sim D_{10}$ (DUM1~DUM10): 산업구분 더미변수

ε : 오차항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가설 I, II 회귀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1992년~2006년 동안 54개 고유업종의 표본 수는 645개이다. 고유업종의 사업체 수는 2개가 가장 작고 1030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출하액은 최솟값이 10.73, 최댓값이 90,737.36으로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고유업종·적합업종이 다수의 중소기업이 종사할 것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체들의 사업체 수나 생산규모가 비슷하게 밀집된 업종들이 고유업종이나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사업체 수가 2개였던 업종은 1996년의 보청기 제조업으로 실질출하액도 10.73으로 최소로 나타났다. 실질출하액이 최댓값을 기록한 2003년의 레미콘 제조업은 사업체 수가 778개로 나타나 평균 실질출하액 크기는 다른 업종들과 유사하였다. 평균 실질출하액의 표준편차는 26.10으로 사업체 수, 실질출하액에 비하여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가장 작은 평균 실질출하액을 기록한 업종은 1994년 알루미늄 단조물 제조업으로 4.20이었으며 최댓값을 기록한 업종은 1992년 쇠못 제조업으로 183.08 이었다.

<표 IV-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업체 수	645	2.00	1030.00	132.61	193.58
실질출하액	645	10.73	90737.36	4548.17	11158.30
평균 실질출하액	645	4.20	183.08	32.49	26.10

2. 독립변수 기술통계분석

고유업종 지정연차의 최댓값은 13으로 1992년~2006년(1993년, 1998년, 2011년 제외) 내내 지정되었던 안경테, 생석회, 아스콘, 골판지 상자, 우산 및 양산 제조업의 경우이다. 미지정과 지정 전, 후 모두 값이 0이므로 지정연차가 0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평균은 0에 가까운 2.75이고 표준편차는 3.73이다.

지정해제 연차의 최댓값은 9로 1997년 1월에 해제된 이불 및 요, 판지상자, 세탁비누, 헤드폰 및 이어폰, 밀링기, 철망, 기타 낚시장비, 핸드백, 바인더, 마네킹 제조업이 해당된다. 미지정과 지정 전, 지정 중인 경우, 모두 값이 0이므로 지정해제 연차가 0인 경우가 약 80%를 차지한다. 평균은 0.86으로 0에 매우 가깝고 표준편차는 지정연차의 표준편차보다 작다.

<표 IV-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지정연차	645	0	13	2.75	3.73
지정해제 연차	645	0	9	0.86	2.06

지정연차	빈도(개)	비율(%)
0	334	51.78
1년차	35	5.43
2년차	35	5.43
3년차	35	5.43
4년차	35	5.43
5년차	24	3.72
6년차	24	3.72
7년차	24	3.72
8년차	24	3.72
9년차	18	2.79
10년차	18	2.79
11년차	18	2.79
12년차	16	2.48
13년차	5	0.78
합 계	645	100.00

지정해제 연차	빈도(개)	비율(%)
0	510	79.07
1년차	29	4.50
2년차	18	2.79
3년차	16	2.48
4년차	16	2.48
5년차	16	2.48
6년차	10	1.55
7년차	10	1.55
8년차	10	1.55
9년차	10	1.55
합 계	645	100.00

3. 통제변수 기술통계분석

회귀분석 모형에서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최솟값은 1992년인 1,107.63만원이고 최댓값은 2006년인 1,856.85만원이다. 표준편차가 213.76만원으로 조사기간 동안 우리나라 실질소득이 완만한 성장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장금리는 표준편차가 연리 4.27%로 경기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표본업종을 산업 중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식료품(20.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차 금속·금속가공제품(16.28%),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2.09%) 순이다. 섬유제품은 ‘이불 및 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세탁비누’로 각각 1개 업종만이 존재한다. 이처럼 산업별로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므로 산업구분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산업분야 내 경기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표 IV-3> 고유업종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실질 국민소득	645	1107.63	1856.85	1525.03	213.76
시장금리	645	3.32	14.26	7.68	4.27

산업 중분류 구분	빈도(개)	비율(%)
식료품	130	20.16
섬유제품	13	2.02
잡화제품	52	8.0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78	12.09
비금속광물제품	52	8.06
1차 금속·금속가공제품	105	16.2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3	2.02
고무제품	26	4.03
전기장비	59	9.15
기계장비	65	10.08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품	52	8.06
합 계	645	100.00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1.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 검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추정식을 이용하는 회귀분석(이종수, 2009)을 말한다. 특정 변수값의 변화와 다른 변수값의 변화가 가지는 수학적 선형의 함수식을 파악함으로써 상호관계를 추론하는 것으로 어느 변수의 변화

가 원인이 되고 어느 변수의 변화가 결과적인 영향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은 학문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첫째, 실증분석으로써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도구, 둘째, 독립변수의 값을 기초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도구가 된다.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cdots + \beta_k X_{ki} + \varepsilon_i$$

OLS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변수들 간 자기상관성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1)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 진단

자기상관이란 서로 다른 시차의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오차항 간 독립성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다.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urbin-Watson 검정을 각 회귀분석 모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0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울수록 독립성이 강하고 0에 가까우면 인접 오차항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값이 모두 2에 가깝게 나타나 오차항 간 독립성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표 IV-4> Durbin-Watson 통계량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	d
가설 I -1, II-1모형	사업체수	2.183
가설 I -2, II-2 모형	실질출하액	2.263
가설 I -3, II-3모형	평균 실질출하액	2.091

2)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들 간 다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크면 베타(beta)값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영향력이 유의한 변수를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검정할 우려가 있다.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모형을 진단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 수	Tolerance	VIF
지정연차	.618	1.618
지정해제 연차	.505	1.982
실질 1인당국민소득	.240	4.159
시장금리	.262	3.818
DUM1	.854	1.172
DUM2	.650	1.540
DUM3	.620	1.613
DUM4	.726	1.377
DUM5	.604	1.656
DUM6	.854	1.172
DUM7	.815	1.227
DUM8	.743	1.346
DUM9	.730	1.370
DUM10	.712	1.405

2.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유업종 지정연차와 지정해제 연차가 사업체 수, 실질출하액, 평균 실질출하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가 사업체 수인 모형: 가설 I -1, II-1

<표 IV-6> 가설 I -1, II-1모형 (종속변수: 사업체 수)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159.162	119.727		-1.329	.184
독립 변수	지정연차	-8.654	2.325	-.167	-3.722	.000
	지정해제 연차	-28.633	4.667	-.304	-6.135	.000
통제 변수	실질 1인당국민소득	.195	.065	.216	3.005	.003
	시장금리	-1.747	3.119	-.039	-.560	.576
	DUM1	157.430	52.441	.114	3.002	.003
	DUM2	38.189	31.030	.054	1.231	.219
	DUM3	179.791	26.523	.303	6.779	.000
	DUM4	181.083	29.346	.255	6.171	.000
	DUM5	-15.525	23.732	-.030	-.654	.513
	DUM6	-2.570	52.441	-.002	-.049	.961
	DUM7	-46.545	38.342	-.047	-1.214	.225
	DUM8	42.215	27.403	.063	1.541	.124
	DUM9	140.229	26.468	.218	5.298	.000
	DUM10	-3.933	29.643	-.006	-.133	.894

(F = 12.655, R² = .220, Adj R² = .202)

<표 IV-6>로 요약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통계량 값은 유의수준이 매우 작은 경우에도(p 값 <0.001) F변화량이 12.655로 큰 값을 가져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R^2 결정계수에 따르면 사업체 수에 대하여 22.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사업체 수에 대한 지정연차와 지정해제 연차의 회귀계수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진다. 두 변수 모두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0, 0.010 기준에서도 유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정해제 연차의 B가 -28.633으로 지정연차의 B보다 절댓값이 더 크게 나타나 사업체 수가 지정 당시 보다 지정해제 이후, 더욱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가 증가할수록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고유업종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사업체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증가시킨다.’는 가설 I-1을 기각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감소시킨다.’는 가설 II-1을 채택한다.

2) 종속변수가 실질출하액인 모형: 가설 I -2, II-2

<표 IV-7> 가설 I -2, II-2모형 (종속변수: 실질출하액)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12651.822	6481.086		-1.952	.051
독립 변수	지정연차	-862.267	125.864	-.288	-6.851	.000
	지정해제 연차	-1488.155	252.651	-.274	-5.890	.000
통제 변수	실질 1인당국민 소득	10.698	3.519	.205	3.040	.002
	시장금리	-61.149	168.843	-.023	-.362	.717
	DUM1	4948.157	2838.716	.062	1.743	.082
	DUM2	4002.675	1679.706	.098	2.383	.017
	DUM3	8221.950	1435.760	.240	5.727	.000
	DUM4	23204.413	1588.577	.567	14.607	.000
	DUM5	3408.869	1284.668	.113	2.654	.008
	DUM6	3248.807	2838.716	.041	1.144	.253
	DUM7	2467.385	2075.526	.044	1.189	.235
	DUM8	4149.062	1483.364	.107	2.797	.005
	DUM9	3883.272	1432.785	.105	2.710	.007
	DUM10	2857.139	1604.645	.070	1.781	.075

(F = 20.372, R^2 = .312, Adj R^2 = .296)

<표 IV-7>를 살펴보면 통계량 값은 유의수준이 매우 작은 경우에도(p 값<0.001) F변화량이 20.372로 큰 값을 가져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R^2 결정계수에 따르면 실질출하액에 대하여

31.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실질출하액에 대한 지정연차와 지정해제연차의 회귀계수가 모두 음의 값을 갖는다. 둘 다 유의확률이 0.000으로 0.010의 유의수준보다도 낮은 값을 가져 상당히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정해제 연차의 B의 절댓값이 지정연차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나 지정해제 이후, 업종지정 당시 보다 실질출하액이 더욱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가 증가할수록 실질출하액이 감소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실질출하액은 감소한다. 즉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는 가설 I -2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는 가설 II -2를 모두 기각한다.

3) 종속변수가 평균 실질출하액인 모형: 가설 I -3, II-3

<표 IV-8> 가설 I -3, II-3모형 (종속변수: 평균 실질출하액)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10.000	15.230		-.657	.512
독립변수	지정연차	-.619	.296	-.088	-2.093	.037
	지정해제연차	-2.023	.594	-.159	-3.407	.001
통제변수	실질 1인당국민소득	.018	.008	.149	2.196	.028
	시장금리	.255	.397	.042	.642	.521
	DUM1	.832	6.671	.004	.125	.901
	DUM2	2.827	3.947	.030	.716	.474
	DUM3	15.944	3.374	.199	4.726	.000
	DUM4	43.150	3.733	.450	11.559	.000
	DUM5	33.267	3.019	.471	11.020	.000
	DUM6	32.593	6.671	.176	4.886	.000
	DUM7	12.680	4.877	.096	2.600	.010
	DUM8	24.633	3.486	.272	7.067	.000
	DUM9	13.607	3.367	.157	4.042	.000
	DUM10	5.265	3.771	.055	1.396	.163

(F = 19.784, R^2 = .305, Adj R^2 = .290)

F변화량이 19.784로 모형이 적합하며 R^2 결정계수에 따르면 평균 실질출하액에 대하여 30.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평균 실질출하액에 대한 지정연차와 지정해제연차의 회귀계수가

모두 음의 값을 갖는다. 둘 다 유의확률이 0.050 이하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정해제 연차의 B의 절댓값이 지정 연차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나 지정해제 이후, 업종지정 당시 보다 평균 실질출하액이 더욱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평균 실질출하액을 감소시키고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연차의 증가도 평균 실질출하액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는 가설 I-3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는 가설 II-3을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체 수와 생산규모, 평균생산규모를 모두 감소시키고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지정해제 연차의 증가도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생산규모를 모두 감소시킨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9>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내 용	결 과
연구가설 I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증가시키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며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가설 I-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증가시킨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감소시킨다.	기각
가설 I-2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생산규모를 감소시킨다.	기각
가설 I-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후, 지정연차의 증가는 평균생산규모를 감소시킨다.	기각
연구가설 II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며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가설 II-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 수를 감소시킨다.	채택
가설 II-2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생산규모를 감소시킨다.	기각
가설 II-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킨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의 증가는 평균생산규모를 감소시킨다.	기각

3. 추가적 회귀분석: 사양산업 통제

회귀분석 결과, 고유업종 지정연차가 증가하든, 지정해제 후, 해제 연차가 증가하든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생산규모가 모두 감소한다. 또한 지정해제 연차가 증가할 때,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유업종 지정이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으나 애초에 사양산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여 사양산업이 종속변수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여 볼 필요가 있다.

1) 사양업종의 기준 및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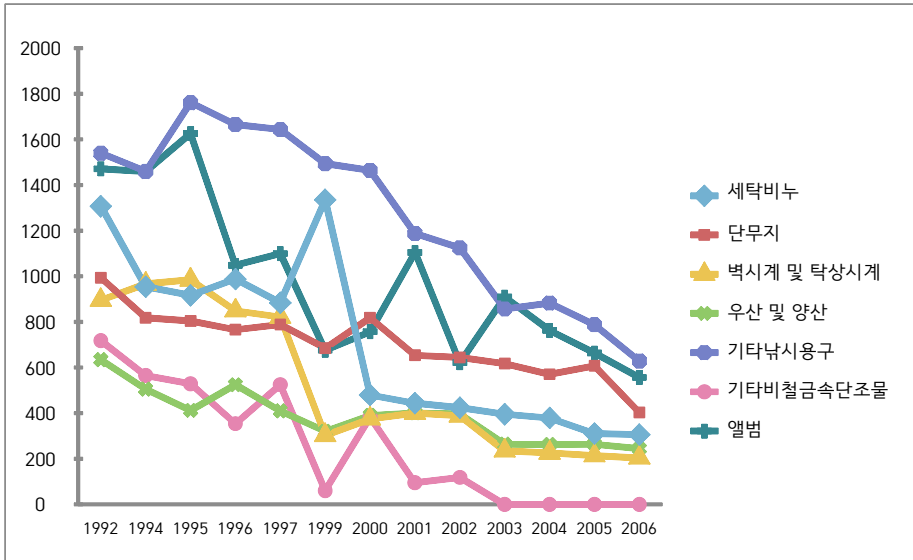
사양업종이란 새로운 기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해 가는 산업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섬유, 의복 등을 사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²⁵⁾. 본 논문에서는 표본업종들 중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실질출하액의 등락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전체 실질출하액이 감소한 업종을 사양업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업종은 세탁비누, 단무지, 벽시계 및 탁상시계, 우산 및 양산, 기타 낚시용구, 기타 비철금속단조물, 앨범, 핸드백의 10개 업종으로 645개 표본 중 100개 표본이 해당한다. 잡화제품 제조업에서 2개, 식료품, 종이제품, 화학제품, 고무제품, 1차금속·금속가공제품, 시계제품 제조업에서 각각 1개씩이다. 다음의 <표 IV-10>와 <그림 IV-1>에서 추출된 사양업종의 실질출하액 변화를 살펴보면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5) 기획재정부(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표 IV-10> 사양업종의 연도별 실질출하액

연도	세탁비누	단무지	벽시계 탁상시계	우산 양산	기타 낙시 용구	핸드백	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앨범
1992	1307.49	993.30	895.31	634.13	1540.06	5177.86	717.96	1471.19
1994	954.59	818.52	966.79	505.73	1459.81	3892.24	564.64	1459.88
1995	916.51	804.28	984.73	412.18	1761.36	4364.19	528.58	1626.55
1996	988.50	766.07	848.45	524.56	1665.47	4482.60	353.78	1048.69
1997	883.94	789.04	821.76	409.73	1643.95	3857.87	525.33	1100.13
1999	1335.89	685.23	302.85	320.76	1493.92	5091.11	60.52	675.75
2000	480.22	818.13	374.71	390.14	1464.39	4356.93	382.63	757.13
2001	443.79	653.70	400.34	401.41	1187.95	3283.63	94.91	1104.73
2002	424.24	644.24	388.55	396.84	1125.15	3745.90	118.26	621.41
2003	395.63	617.38	235.06	263.93	856.62	3154.74	-	909.53
2004	379.18	570.78	226.11	263.49	882.45	3278.91	-	763.00
2005	310.89	607.43	213.75	263.80	787.82	2746.87	-	664.29
2006	306.21	403.51	203.77	244.47	628.55	2697.46	-	556.32

<그림 IV-1> 사양업종의 연도별 실질출하액 변화 추이²⁶⁾



26) 8개 사양업종 중 실질출하액이 가장 큰 '핸드백'은 하나의 그래프 안에 나타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2) 추가 회귀분석모형

사양산업에 속한 업종이 종속변수 값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제변수 ‘사양업종더미×연차(FAD)’를 도입한다. 사양업종더미×연차 변수는 사양업종 = 1, 비사양업종 = 0으로 나타낸 사양업종 더미와 각 표본 연도를 1992년은 1, 1994년은 2, …, 2006년은 13으로 차례로 나타낸 연차를 곱한 변수이다. 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시간경과에 따라 사양업종이 가중적으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이상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sum_{i=1}^{10} \delta_i D_i + \varepsilon$$

Y (NUM or VOL or AVE): 업종별 사업체 수 or 업종별 실질출하액 or 업종별 평균 실질출하액

X_1 (BID): 고유업종 지정연차

X_2 (FAD): 사양업종더미×연차

(0 = 비(非)사양업종, n = 사양업종의 n년차)

X_3 (INC): 실질 1인당 국민소득

X_4 (RATE): 시장금리

$D_1 \sim D_{10}$ (DUM1~DUM10): 산업구분 더미변수

ε : 오차항

3) 추가 회귀분석 결과

(1) 다중공선성 및 자기공선성 진단

Durbin-Watson 통계량과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이나 자기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12>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 수	Tolerance	VIF
지정연차	.782	1.278
사양업종 연차더미	.634	1.578
실질 1인당국민소득	.262	3.819
시장금리	.262	3.817
DUM1	.925	1.081
DUM2	.626	1.597
DUM3	.690	1.449
DUM4	.734	1.362
DUM5	.630	1.588
DUM6	.816	1.226
DUM7	.826	1.210
DUM8	.753	1.328
DUM9	.733	1.364
DUM10	.725	1.380

<표 IV-11>
Durbin-Watson
통계량

종속변수	d
사업채수	2.181
실질출하액	2.282
평균 실질출하액	2.127

(2) 회귀분석 결과

<표 IV-13> 추가 회귀분석모형 1 (종속변수: 사업체 수)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10.972	119.652		-.092	.927
독립 변수	지정연차	-2.641	2.116	-.051	-1.248	.213
	사양업종더미 × 연차	-7.928	3.056	-.117	-2.594	.010
통제 변수	실질 1인당국민소득	.092	.064	.101	1.435	.152
	시장금리	-1.255	3.193	-.028	-.393	.694
	DUM1	60.766	51.579	.044	1.178	.239
	DUM2	-1.439	32.365	-.002	-.044	.965
	DUM3	131.577	25.735	.222	5.113	.000
	DUM4	157.829	29.884	.222	5.281	.000
	DUM5	-44.769	23.799	-.085	-1.881	.060
	DUM6	-43.736	54.934	-.032	-.796	.426
	DUM7	-77.179	38.991	-.078	-1.979	.048
	DUM8	14.730	27.873	.022	.528	.597
	DUM9	116.619	27.049	.181	4.311	.000
	DUM10	-27.922	30.081	-.039	-.928	.354

(F = 9.986, R² = .182, Adj R² = .163)

<표 IV-14> 추가 회귀분석모형 2 (종속변수: 실질출하액)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4881.246	6470.303		-.754	.451
독립 변수	지정연차	-546.548	114.426	-.183	-4.776	.000
	사양업종더미 ×연차	-378.402	165.266	-.097	-2.290	.022
통제 변수	실질 1인당국민소득	5.232	3.449	.100	1.517	.130
	시장금리	-34.214	172.686	-.013	-.198	.843
	DUM1	-49.992	2789.178	-.001	-.018	.986
	DUM2	1787.167	1750.161	.044	1.021	.308
	DUM3	5694.442	1391.653	.167	4.092	.000
	DUM4	22008.836	1616.018	.537	13.619	.000
	DUM5	1888.037	1286.944	.063	1.467	.143
	DUM6	899.470	2970.611	.011	.303	.762
	DUM7	885.855	2108.495	.016	.420	.675
	DUM8	2741.644	1507.243	.071	1.819	.069
	DUM9	2682.175	1462.691	.072	1.834	.067
	DUM10	1564.951	1626.644	.038	.962	.336

(F = 17.475, R² = .280, Adj R² = .264)

<표 IV-15> 추가 회귀분석모형 3 (종속변수: 평균 실질출하액)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1.705	14.784		-.115	.908
독립 변수	지정연차	-.295	.261	-.042	-1.129	.259
	사양업종더미 ×연차	-1.626	.378	-.179	-4.307	.000
통제 변수	실질 1인당국민소득	.013	.008	.107	1.655	.098
	시장금리	.246	.395	.040	.624	.533
	DUM1	-6.814	6.373	-.037	-1.069	.285
	DUM2	4.965	3.999	.052	1.242	.215
	DUM3	13.225	3.180	.165	4.159	.000
	DUM4	41.094	3.692	.429	11.129	.000
	DUM5	31.230	2.941	.442	10.620	.000
	DUM6	36.331	6.788	.196	5.353	.000
	DUM7	10.180	4.818	.077	2.113	.035
	DUM8	22.023	3.444	.243	6.395	.000
	DUM9	11.116	3.342	.128	3.326	.001
	DUM10	5.009	3.717	.052	1.348	.178

(F = 20.485, R^2 = .313, Adj R^2 = .298)

사양업종의 연차별 가중치의 영향을 통제할 때, 고유업종 지정연차 증가에 따라 실질출하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체 수와 평균 실질출하액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초기 회귀분석에서 지정연차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체 수와 생산규모, 평균생산규모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사양업종을 제외하더라도 고유업종 지정 후, 시간이 경과될수록 생산규모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54개 표본 업종 중 10개 업종만이 사양업종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전체 제조업 중 사양산업인 업종만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성장가능성이 있음에도 생산규모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양업종 연차더미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져 연차 증가에 따라 사업체 수, 실질출하액, 평균 실질출하액이 모두 감소하는 사양산업의 특성을 드러낸다.

4. 종합 해석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선 고유업종 지정 이후, 기간이 경과될수록 지정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체 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을의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할 것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이 아니라면 신규 진입하여 보호기간 동안의 지대(rent)를 노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체 수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추가 분석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을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신규 진입하거나 대기업을의 독점적 영향력 때문에 시장에서 철수하였을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머물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즉 예상하였던 고유업종제도의 중소기업 보호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양산업의 영향을 통제하여도 업종별 생산규모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경쟁을 저해한 것을 들 수 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의 배타적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효율적인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및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 간 경쟁이 야기된다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임해진(2004)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유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26.4%가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38.9%가 평균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가 0.2% 미만에 그쳤으며²⁷⁾ 투자비율이 낮은 이유로 가장 먼저 ‘기술개발 자금부족(37.5%)’, 그 다음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30.6%)’을 꼽았다. 이밖에도 대기업 진입 제한으로 중소기업들이 Gordon Tullock이 지적한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할 유인이 커진다. 즉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고유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를 하는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고유업종 내에서 중소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진입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비용극소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생겨 X-비효율성(X-inefficiency)을 유발한다. 이러한

<div> <div><평균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div> <div>(개사, %)</div> </div>			<div> <div><기술개발 투자시 애로사항></div> <div>(개사, %)</div> </div>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항목	응답자수	비율
거의 없음	38	26.4	산업의 성숙	28	19.4
0.1% 미만	38	26.4	자금 부족	54	37.5
0.1-0.2% 미만	18	12.5	회사의 관심 부족	6	4.2
0.2-0.3% 미만	10	6.9	가격경쟁력에 의존	44	30.6
0.3-0.5% 미만	10	6.9	기술도입으로 해소	6	4.2
0.5% 이상	30	20.8	기타	6	4.2

(자료: 임해진(2004))

비효율로 인하여 업종 전체의 생산규모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고유업종 선정기준 중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품질향상이나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기준에 위배된다.

평균생산규모 역시 지정연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양산업을 통제한 추가 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생산규모가 증가하리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지정연차가 경과될수록 중소기업체 수의 감소폭보다 생산규모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업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보호기간 동안 기술 경쟁력을 키워서 고유업종 지정해제 이후, 대기업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전략과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로 위험을 부담하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여 정부의 보호 속에서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전략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이 전자를 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유업종이 지정해제되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압력을 이겨내고 성장할 만한 시장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생산규모와 평균생산규모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중소기업이 후자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유업종 지정해제 이후, 해제연차가 증가됨에 따라 중소기업체 수의 감소는 심화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중소기업체 수가 업종 지정기간 동안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정해제에 따라 이탈이 가속화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진입규제가 해제되어 대기업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되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다.

해제연차의 증가도 생산규모를 감소시킨다.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면 고유업종제도 졸업 이후, 성장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오히려 생산규모가 감소하였다. 보호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기에는 가설 I-2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고유업종 지정 기간 동안에도 생산규모가 감소하였다.

평균생산규모 역시 해제연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는 고유업종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 대기업의 신규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기존 중소기업의 규모도 더욱 영세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양업종이 소수였음을 고려할 때, 규제당국은 고유업종제도가 없어도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는, 중소기업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은 업종을 선정하였다. 이는 고유업종 선정기준인 ‘대기업의 참여가능성이 비교적 큰 품목’에 부합하지 않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사양산업이 아닌데도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평균생산규모도 작아졌다는 것은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 아니라는 점과 이 제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 Mill과 Bastable이 제시한 유치산업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보호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교우위를 얻지 못하였고 고유업종제도가 야기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만한 이득을 창출하지도 못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체 수를 증가시키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

적 · 기술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비효율을 유발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저해하고 기업규모는 더욱 영세해졌다. 고유업종제도 졸업 이후에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생산규모가 모두 감소하여 유치산업 보호론에서 주장하는 보호기간 동안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덧붙여 규제당국은 업종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을 선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산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유치산업보호론적 측면에서 업종지정 이후, 지정연차 경과와 지정해제 이후, 지정해제 연차 경과가 산업성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 생산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시장금리, 10개의 산업중분류 구분더미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지정연차의 증가는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 생산규모를 모두 감소시키고 지정해제연차의 증가도 중소기업체 수, 생산규모, 평균 생산규모를 모두 감소시켰다. 애초에 사양업종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양업종 연차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정연차의 증가가 중소기업체 수와 평균 생산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생산규모는 뚜렷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분석 결과가 사양업종만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서 나타난 결과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체 수와 평균생산규모를 증가시키지 않고 생산규모를 감소시켜 정책이 의도하였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통한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 ·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찬반논의가 오랜 시간동안 끊임없이 대립해온 데에 비하여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초로 유의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겠다. 본 연구를 계기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처럼 사업영역을 법률상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 정책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고유업종제도와 달리 민간위원회가 운영하며 법률상 강제성이 없고 보호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나 서비스업도 포함하며 대기업의 사업이양까지 권고할 수 있어 규제분야와 범위가 넓다. 적합업종제도도 개별 기업이 아닌 업종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점이 고유업종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의 결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면 중소기업이 경쟁을 통하여 받은 피해는 시장경쟁의 속성상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윤보·이동주, 2004)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집중해야 하고 인위적 진입장벽을 통해 아예 경쟁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적합업종제도의 전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기술혁신 속

도가 빨라지고 융복합 산업이 각광받는 현대에 특정 산업분야를 중소기업형이라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안경테, 안경렌즈,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재생타이어 등의 품목도 외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생산한다. 따라서 업종 전체 보다는 개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으로 비(非)적합업종 중소기업 역차별 논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규제당국의 역량 부족도 지적할 수 있다. 고유업종 지정 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품질향상이나 수급에 문제가 없고 대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큰’ 품목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 결과, 직접적인 수급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생산규모가 감소하였고 대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큰 품목이 지정된 것도 아니었다. 당국이 세운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업종을 선정하여 미숙한 제도운행을 보여주었다.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역량 부족의 우려는 다소 적을 수 있으나 민간의 주도로 기업 간 정치적 협상으로 전락하거나 포획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본 연구결과, 진입장벽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이 중소기업 보호의 이익보다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적합업종제도도 긍정적 영향보다 그 폐해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업종 규제 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타파, 중소기업의 자금·인력난 해소,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유업종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어 20년 넘게 유지되었으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지, 대기업이 점유하는 현상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종속변수로 사업체 수, 실질출하액, 평균 실질출하액만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산업성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비율, 시장집중도를 보기 위한 HHI지수, CR 지표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정부 통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시장집중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향후, 적합업종에 대한 시장집중도 지표 통계가 축적되면 보다 면밀한 산업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합업종제도의 효과가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양 제도 간 취지와 규제방식이 유사하여 앞으로의 적합업종 운영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논문의 시사점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지는 향후, 적합업종에 대한 통계자료가 축적되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모형설계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향후,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시장금리 이외에도 환율변화, 유가변동 등 연도별 환경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 실질 출하액 변수도 시장물가가 아닌 각 품목 단가로 나눈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 문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2012).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流通研究. Vol.17 No.5. 한국유통학회. 1-23.

국회입법조사처 (201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27호.

김갑곤 (199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무 (2012).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목적과 기대효과. 이슈와 전망 Vol. 27. 법제연구원. 8-13.

김민재 (2013). 대·중소기업 간 협력, 경쟁우위 및 기업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S-전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중 (2011a).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71-97.

김세중 (2011b).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 및 향후과제.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12호. 중소기업연구원. 1-15.

김세중 (2012).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중·노용환 (20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도입과 향후 과제. 중소기업금융연구 제 324호. 서울: 신용보증기금. 3-26.

김영수 정리 (2011). 중기 고유업종 해제 후, 중소기업 경영성과 개

선. (월간)전경련. 통권 제565호. 서울 : 전국경제인연합회. 72-73.

김은자 (1997).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김진영 (2008). 바람직한 성과 공유 모델에 관한 연구: 상생 협력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필현 (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 방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기획재정부 (2012). 중장기전략회의 제4차 회의자료.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inwingrowth.or.kr>).

박은태 편 (2011). 경제학 사전. 경연사.

박충렬 (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제270호.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2012). 재벌의 지나친 사업영역 확장 억제 방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제도의 강화. 이슈와 논점 제376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연구원 (1992).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제도의 발전방안: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자료.

신기룡 (201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정근(2012).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고려대 -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표자료.

유광수 (2012).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의 필요성: 건강한 시장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이슈와 전망 Vol. 27. 법제연구원. 14-19.

유진수 (1994).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국제경쟁력에 미친 효과분석. 중소기업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73-190.

이선화 (201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KERI-Brief 12-08. 한국경제연구원. 1-8.

이윤보·이동주 (200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75-98.

이준구 (2008). 미시경제학 제5판. 법문사.

임상혁 (2012). 적합업종 선정,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슈와 전망 Vol. 27. 법제연구원. 20-25.

임해진 (200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운찬·김영식 (2010). 거시경제론 제9판. 율곡출판사.

조기수 (2013).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한 유기적 기업생태계 구축과 기업의 역할.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소기업청 (2004).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청 전문용어. 대한민국 정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08). 시사상식바이블. 박문각.

한재민·김혜영(2007). 기업생태계에서의 IT 역할.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1. 한국경영정보학회. 1030-1035.

황인학 (20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두부 제조업의 사례. KERI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1-16.

< 영 문 >

R. H. Coase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ew Series. Vol. 4. Issue 16. 386-405.

Iansiti. M & Levien. R. (2004), The Keystone advantage: What the new dynamics of business ecosystems mean for strateg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James F. Moore(1993),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부 록

- 고유업종 지정여부가 사업체수, 실질출하액, 평균 실질출하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본문에서 고유업종 지정연차 및 지정해제연차 증가에 따른 성숙 효과를 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에서는 단순히 고유업종 지정여부가 업종별 사업체수, 실질출하액, 평균 실질출하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겠다. 고유업종 지정여부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고유업종 지정더미(BIW: 0 = 고유업종 비지정, 1 = 고유업종 지정)’를 설정하고 통제변수로는 지금까지의 회귀분석 모형과 같이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시장금리, 산업구분 더미변수를 사용하겠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sum_{i=1}^{10} \delta_i D_i + \varepsilon$$

Y (NUM or VOL or AVE): 업종별 사업체수 or 실질출하액 or
평균 실질출하액

X_1 (BIW): 고유업종 지정더미

X_2 (INC): 실질 1인당 국민소득

X_3 (RATE): 시장금리

$D_1 \sim D_{10}$ (DUM1~DUM10): 산업구분 더미변수

ε : 오차항

위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인 자기상관성, 다중공선성 진단과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2>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 수	Tolerance	VIF
고유업종 지정더미	.724	1.380
실질 1인당국민소득	.258	3.880
시장금리	.265	3.775
DUM1	.927	1.078
DUM2	.764	1.310
DUM3	.670	1.492
DUM4	.727	1.376
DUM5	.623	1.605
DUM6	.927	1.078
DUM7	.807	1.239
DUM8	.755	1.324
DUM9	.740	1.351
DUM10	.710	1.408

<표 VI-1>

Durbin-Watson 통계량

종속변수	d
사업체수	2.145
실질출하액	2.268
평균 실질출하액	2.091

<표 VI-3> 부록 회귀모형 1 (종속변수: 사업체 수)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43.063	121.257		.355	.723
독립 변수	고유업종 지정더미	-33.950	16.421	-.088	-2.067	.039
통제 변수	실질 1인당국민소득	.052	.064	.057	.806	.420
	시장금리	-.532	3.182	-.012	-.167	.867
	DUM1	70.274	51.606	.051	1.362	.174
	DUM2	-31.793	29.358	-.045	-1.083	.279
	DUM3	135.912	26.167	.229	5.194	.000
	DUM4	170.484	30.091	.240	5.666	.000
	DUM5	-37.884	23.967	-.072	-1.581	.114
	DUM6	-89.726	51.606	-.065	-1.739	.083
	DUM7	-60.678	39.522	-.062	-1.535	.125
	DUM8	21.892	27.881	.033	.785	.433
	DUM9	122.111	26.964	.190	4.529	.000
	DUM10	-26.173	30.436	-.037	-.860	.390

(F = 10.467, R^2 = .177, Adj R^2 = .160)

<표 VI-4> 부록 회귀모형 2 (종속변수: 실질출하액)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1354.520	6496.138		.209	.835
독립 변수	고유업종 지정더미	-5168.920	879.749	-.232	-5.875	.000
통제 변수	실질 1인당국민소득	.747	3.450	.014	.216	.829
	시장금리	75.673	170.456	.029	.444	.657
	DUM1	919.764	2764.710	.012	.333	.739
	DUM2	813.581	1572.810	.020	.517	.605
	DUM3	6471.024	1401.877	.189	4.616	.000
	DUM4	22879.850	1612.065	.559	14.193	.000
	DUM5	2418.374	1283.994	.080	1.883	.060
	DUM6	-779.586	2764.710	-.010	-.282	.778
	DUM7	2231.068	2117.343	.039	1.054	.292
	DUM8	3256.267	1493.706	.084	2.180	.030
	DUM9	3049.390	1444.561	.082	2.111	.035
	DUM10	2244.945	1630.567	.055	1.377	.169

(F = 19.767, R² = .289, Adj R² = .275)

<표 VI-5> 부록 회귀모형 3 (종속변수: 평균 실질출하액)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5.069	15.139		.335	.738
독 립 변 수	고유업종 지정더미	-3.065	2.050	-.059	-1.495	.135
통 제 변 수	실질 1인당국민소득	.008	.008	.062	.945	.345
	시장금리	.344	.397	.056	.866	.387
	DUM1	-5.279	6.443	-.028	-.819	.413
	DUM2	-1.967	3.665	-.021	-.537	.592
	DUM3	13.085	3.267	.164	4.005	.000
	DUM4	42.687	3.757	.446	11.362	.000
	DUM5	31.899	2.992	.452	10.660	.000
	DUM6	26.483	6.443	.143	4.110	.000
	DUM7	12.077	4.934	.091	2.447	.015
	DUM8	23.248	3.481	.257	6.678	.000
	DUM9	12.292	3.366	.142	3.651	.000
	DUM10	4.031	3.800	.042	1.061	.289

(F = 20.287, R^2 = .295, Adj R^2 = .280)

이상에서 본문의 실증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모형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모두 음의값을 가진다. 다만 평균 실질출하액에 대해서는 고유업종 지정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유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체수, 실질출하액이 모두 감소하고 평균 실질출하액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유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체를 보호하여 중소기업 수를 증가시키거나 생산규모, 평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는 성장효과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s of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es for SMEs” to the industrial growth

Yeon, Jeong eu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1,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es for SMEs” revived under the name of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to mitigate ‘polarization’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which was abolished in 2006.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es for SMEs”, As one of the business area protection system for SMEs, is to establish legal restrictions of conglomerate entrants to the industries more efficient to the SMEs. It was abolished under the criticism that the system had

caused weakening of competitiveness, the growth evasion of superior SMEs and bringing about market share expansion of foreign firms. Recently, however,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was institutionalized on the basis of which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medium firms had become wider in many indicators, such as production index, value added and productivity and the issue of indiscriminate expansion by conglomerates so-called ‘octopus style’ has been brought up. The purpose of both system is the same, but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is different from the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es for SMEs” in terms that the steering committee,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is composed of civilians and to impose sanctions through the social pressure and also to induce not only refraining of conglomerates entry but restraining of business expansion and voluntary transfer of business unit.

Currently,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is simultaneously facing both criticism and public supports that is ‘a revival of obsoleted regulation’ and ‘a indispensable policy for long-term win-win growth’. As a theoretical support grounds for argument, aspects of business ecosystem building and infant industry protection are argued. On the opposite side, inefficiencies of artificial barriers to entry in market, theory of second-best and government failure are mentioned. During the controversy, nevertheless, significant empirical analysis has not been performed from advanced research on the effect of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es for SMEs” and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Most advanced researches only remained in the trend forecast and time series analysis. Even in the research that made the empirical analysis, sample size was too

small to derive significant conclusions.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previous studies, ensured a large number of samples and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by setting up year · industry-specific as control variables.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was excluded because its implementation period is too short to be a subject of analysis. 54 business types and 645 panel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period of 1992~2006 that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es for SMEs” had been conducted. By setting the year number of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distinct business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alyzed the effect of the policy on industrial growth with the passage of time. As dependent variables, by considering scale of production and the average production capacity, analyzed the effect of growth and protection of SMEs to which the policy was intended. By introducing real per capita income and market interest rates as control variables, excluded the impact of annual business fluctuations. Also 10 types of mid-level industry classification were introduced as a dummy variable to control industry-specific economic condition.

In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fter designation, the elapse of year number reduced the number of small enterprises and both production scale and average production scale. Furthermore, after cancellation, the elapse of year number decreased the number of small enterprises, production scale and average production scale. Addition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ainly declining businesses might have been designate as ‘distinct business’. Therefore added new variable defined as ‘dummy variable× year number variable’, by taking 10 declining business dummy variables (0 = non-declining businesses, 1 = declining businesses) from 54

sample and multiplied dummy variables by year number variable(1 = 1992, 2 = 1994, ..., 13 = 2006). In results from the further analysis, even though the effect of declining business has been controlled, increase of year number of designation decreases production capacit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SMEs and average production capacity haven't appeared.

To sum up,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 does decrease production capacity but doesn't increase the number of SMEs and the average production scale by passage of time. In other words, the growth effect and protection of SMEs which was expected hadn't appeared. The reasons are as follows. Designation causes inherent inefficiencies because it is still one of competition restrictive regulations. And only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had been promoted without establishing market environment able to encourage SMEs investment on R&D.

Also it is possible that SMEs which obtained monopolistic position acted rent-seeking or caused the X-inefficiency. The policy failed to provide a foundation that help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grow to mid-sized enterprises. As a result, the scale of SMEs deteriorated. Even after cancellation, there was no entry of new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SMEs that had failed in ensuring competitiveness during the protection period decreased far more rapidly. Despite a small number of declining businesses, the fact that large firms had not entered the market implies the designated business sectors doesn't require of massive investments. Since cancellation was executed, decrease in production scale index and average production scale shows that SMEs wasn't able to be grown to mid-sized companies. It

means the policy had functioned neither contributing to stability n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SMEs.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is considered as competition restrictive regulation that is possible to make recommendations to let large firms transfer business and has the same purpose as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es for SMEs”, Although subject of regulation is the private committee and its recommendations remains on the level of social sanctions. Moreover the negative effects of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seems to be larger than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y because tha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suitable business to SMEs as well as build appropriate standards for the business. Thus, establishing fair competitive market should be considered first rather than restraints of business through reforming unfair trading system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eliminating the funds and labor shortage of SMEs and enabling business mediation.

Keywords: SMEs, win-win growth,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es for SMEs, suitable business for SMEs system, industrial growth, production scale

Student Number: 2012-23769